

소득하위 70%에 최대 60만원 '전쟁 추경' 26.2조 푼다

정부, 26조 2천억 규모 추경안 의결
증시호조 따른 초과세수 25조 투입
고유가 대응·민생 안정 등에 방점

소득하위 70% 국민 3580만 명에게
1명당 10만~6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
된다. 중동전쟁발 고유가에 대응하는
추가경정예산안에 피해지원금 성격의
4조 8000억 원이 편성됐다.

석유 최고가격제를 비롯해 유류비·

교통비 경감 등 에너지 부담 완화에도
약 5조 원이 배정됐다. 정부는 추경으
로 0.2%p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
으로 전망했다.

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
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6조
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.
올해 출범한 기획예산처가 내놓은 첫
추경안이자 지난해 6월 이재명정부 출
범 이후로는 두 번째로, 정부는 '중동
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

안'이라는 명칭을 붙였다. 재원은 추가
적인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와 증시 호
조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000억 원과
자체재원 1조 원 등을 활용하기로 했
다.

추경안은 고유가 대응, 민생 안정, 산
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3개
분야에 중점이 맞춰졌다. 고유가 대응
및 민생안정을 위한 피해지원금 명분
으로 4조 8000억 원이 편성됐다. 소득
하위 70% 국민에게 최대 60만 원을 차

등 지급하는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
는 직접 지원금이다. 소득수준과 더불어
수도권 및 비수도권, 인구감소지역
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.

구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
는 55만~60만 원, 차상위·한부모가정
에는 45만~50만 원, 나머지 소득하위
70% 계층에겐 10만~25만 원씩 지원된
다. 사용처는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
정된다.

지방재정도 대폭 보강한다. 내국세

증가분에 법적으로 연동해 지방재정
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9
조 7000억 원가량 늘어난다. 여기에 청
년 창업·일자리 지원에 1조 9000억 원,
재생에너지 전환에 5000억 원, 공급망
안정화에 7000억 원 등이 각각 투입된
다.

한편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
재정수지는 52조 5000억 원 적자로 본
예산(52조 7000억 원)보다 소폭 줄어
든다. 김현호 기자 khh0303@ggilbo.com

“독선·불통·무능 시정 바로잡을것”

허태정 대전시장 예비후보
‘시정의 정상화’ 공약 발표
주민참여예산제 복원 약속



전 시장은 “민선8기
에서 주민참여예산
이 순차적으로 삭감
돼 민선7기 대비 크
게 줄면서 풀뿌리 민
주주의가 실종됐다”며 “주민참여예
산제 부활로 시민의 참여 효능감을
높이고 장기적으로 관련 플랫폼과 시
민감사관을 통해 시민이 적극적으로
시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”고
밝혔다.

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선 지역화폐
였던 온통대전을 더욱 업그레이드하
고 대전형 생활임금도 확대하겠다고
강조했다. 온통대전의 경우 단순한
캐시백 기능에 국한하지 않고 온통패
스, 온통그린(이상 가치) 등으로 확대
해 대중교통이나 탄소중립에도 이용
할 수 있도록 활용성을 넓힌다. 생활

임금에 대해서도 시와 5개 자치구를
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.

현안 사업과 관련해선 대전교도소
이전 사업과 혁신도시 완성을 제시했
다. 대전교도소의 경우 상대적으로
개발이 더딘 서남부권의 활성화를 위
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한국토지주
택공사(LH), 법무부 등과 협의해 속
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했다. 무너진
혁신도시인 대전 역세권지구와 연축
지구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유치를 통
해 정상화하겠다고 했다.

허 전 시장은 “시민이 살아야 민생
이 살고 민생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.
그리고 경제가 살아야 사업이 완성된
다. 여행 연습이 필요없는 준비된 인
물로 대전을 정상화해야 한다”라고
강조했다.

김현호 기자 khh0303@ggilbo.com



파이팅 외치는 예비후보들

3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
당사에서 열린 충남도지사 공
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본
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예비후보
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. 왼쪽
부터 박수현 후보, 소병훈 중앙
당 선거관리위원장, 나소열·양
승조 후보. 연합뉴스

與野 지선 앞두고 온도차 뚜렷

6·3 지방선거가 두달여 앞으로 다
가왔지만 여야의 분위기는 판이하게
다르다.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표정
관리에 들어간 모양새고 야당인 국민
의힘은 공천 내용에 휩싸여 빠져 나
오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.

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1일 국회에
서 시·도당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
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6·3 지방선
거와 관련해 “대통령과 당 지지율이
높기에 그 어느 때보다 승리 가능성
이 높다고 하지만 선거는 끝날 때까지
끝난 게 아니다”라며 “선거 결과는 두
쟁을 열어봐야 손에 쥘 수 있다”고 했
다. 정 대표는 이어 “(승리를 위해) 인
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대
치로 해볼 생각이다. 동서남북을 가
리지 않고 종횡무진 다니겠다”면서
“이후엔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지
극정성을 다하면 결국 하늘도 움직일

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정 대표는 “비례대표 자체가 정당
의 얼굴이고, 정당 투표로 비례대표
를 뽑기에 후보를 잘 내야 한다”며
“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 당사 앞에는
아직 삭발이나 단식 등 항의 집회
가 거의 없다”고 덧붙였다.

반면 국민의힘은 공천 잡음이 계속
되고 있다.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
위원장은 이날 공관위 전원 사퇴하기
로 했다고 밝혔다.

다만 전남·광주 초대 통합시장 선
거에 출마하는 모양새를 빌렸다. 이
위원장은 앞서 지난 13일 “공천 과정
에서 변화와 혁신을 더 이상 추진하
기 어렵다고 판단했다”며 공관위원
장직에서 사퇴했다가 이후 장동혁 당
대표와 회동 후 다시 업무에 복귀했
다. 그러나 이후 서울·대구·충북 등
에서 잇따른 공천 잡음이 나오면서 이

민주, 낙관론 속 표정관리
국힘, 잇단 공천잡음 논란

위원장은 재차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
전해졌다.

이를 두고 당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
된 것이라는 분석이다. 실제로 장 대
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“이 위원장의
결단을 존중한다”며 “남은 지방선거
와 보궐선거 공천은 별도의 공관위를
꾸러 신속하게 진행할 것”이라고 밝
혔다. 이어 “전남·광주 초대 통합시장
선거 출마라는 (이 위원장의)헌신적
인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한다”
면서 “호남 선거 전체를 진두지휘해
주시기를 기대한다”고 했다.

이 위원장의 사퇴로 새로 구성될
공관위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경기
지사, 대구시장 등과 관련된 업무와
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등을 승계해
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뒤숭숭한
분위기는 여전하다.

서울=강성대 기자 kstars@ggilbo.com

맹수석 예비후보 “정당성·대표성 잃은 단일화”

대전교육감 진보 단일화에 반발



과정에 참여한 강재구
건양대학교 교수에 대
해서도 지적했다. 맹
예비후보는 “강 교수
는 예비후보 등록이
라는 기본적인 절차조차 이행하지 않
은 채 단일화 과정에 참여했는데 이는
단일화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
는 것이다. 교육적 가치나 정책 경쟁이
아니라 한 후보는 ‘단일화 대표’라는
정치적 명분을 얻고 다른 한쪽은 정치
적 존재감을 키우려는 이해관계가 맞
물린 결과다”라고 주장했다. 그러면서
“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한
정상적인 단일화 논의를 다시 시작해
야 한다”라고 촉구했다. 김현호 기자

민주진보 성향 대전시교육감 단일
후보로 성광진 예비후보가 확정된데
대해 맹수석 예비후보가 반발하고 나
섰다. 맹 예비후보는 31일 대전시의회
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“단일화 과정
이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정당성과 대
표성을 상실한 ‘그들만의 해프닝’이다.
인구 39만 명의 세종은 5000여 명의 시
민참여단을 모집해 단일화를 추진했
는데 대전에선 고작 1127명에 그쳤다.
144만 대전시민의 뜻을 반영했다고 보
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”라고
했다.

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단일화

지역사회 동참 ‘소통만족 교육’ 공약 발표

오석진 대전교육감 예비후보



오 후보는 “부모의 직
업이나 경제적 여건,
학생의 성적 등에 따
라 교육의 관심과 지
원이 달라져서는 안
된다”며 “모든 학생을 공정하게 바라
보는 것이 공교육의 기본 역할”이라고
소회를 밝혔다. 또 교육이 학교 안에서
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
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. 오
후보는 “교육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
라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과
제”라며 “지역기관과 연계한 진로교
육과 체험교육 확대와 마을교육 공동
체 활성화를 통해 협력 교육환경을 조
성하겠다”고 약속했다. 이와 함께 공
정한 인사 운영과 교육정보 공개 확대
를 통해 교육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
다는 계획도 밝혔다. 이인회 기자

오석진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는 31
일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
여하는 ‘소통만족 교육’공약을 발표하
고 현재 운영 중인 교육청 소통 시스템
의 실효성을 높여 현장의 목소리가 정
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
구상을 밝혔다.

오 예비후보는 교육정책 제안과 민
원 사항 등에 대한 처리 과정 공개와
답변 책임 강화, 현장 의견 반영 확대
등을 추진할 생각이다. 오 후보는 “소
통은 의견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
아니라 정책 변화로 이어질 때 의미가
있다”며 “학교 현장의 의견이 실제 교
육정책에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겠다”
고 말했다. 특히 교육 소통 과정에서도
공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.

국힘 뺀 여야 6당 개헌안 발의 착수

3일까지 서명 받고 6일 발의 계획

국회가 6·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
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개헌안 발
의 절차에 착수했다.

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(더불
어민주당·조국혁신당·개혁신당·진보
당·사회민주당·기본소득당) 원내대표
와 원외신 국회의장은 31일 초당적 개
헌 추진을 위한 국회 선언문을 발표했
다. 여야 6개 정당은 4월 3일까지 각 당
의원의 서명을 받고 6일 개헌안을 발
의할 계획이다. 우 의장 주도로 성안된
개헌안은 우선 헌법 제명을 ‘대한민국

헌법’으로 한글화 했다. 또 헌법 전문
에 ‘부마민주항쟁과 5·18민주화운동
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’는 내용을 추
가로 명시했다.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
제권도 강화했다. 대통령이 계엄을 선
포한 때에 지체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
도록 하고 국회에서 계엄 승인이 부결
되거나 계엄을 선포한 때부터 48시간
이내에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계
엄은 즉시 효력이 상실되도록 했으며
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때도 즉시
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명시했다.
아울러 국가의 균형발전 의무도 신설
했다. 이기준 기자 lkj@ggilbo.com